



유가공업계 불황

그 원인과 타개책

한국유가공협회
사무이사 장성종

작년 4월 이후 발생한 수급불균형은 여러 분야에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회의 및 좌담회를 실시하였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왔고 그 발표된 방안중 실행에 옮긴 것도 많이 있으나 아직껏 낙농 유업계 불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근본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대책을 보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금번 우유 수급불균형에 의한 어려움은 낙농 유업계가 과거에 겪어 보았던 수급불균형과는 그 유형이 다르고 또한 그에 따른 뚜렷한 타개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작년 4월 이후 발생한 수급불균형은 여러 분야에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회의 및 좌담회를 실시하였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왔으며 그 발표된 방안중 실행에 옮긴 것도 많이 있으나 아직껏 낙농 유업계의 불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필자가 기술코자 하는 타개책도 그동안 거론되었던 방안의 범주를 크게 벗어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단기처방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못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음)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대책을 보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수급현황

우선 '89년도의 우유 수급상황을 검토해볼 때 4월까지의 생산은 전년대비 약 10% 증가하였고 판매는 7.5% 증가에 그쳐 분유재고가 '88년 말 3천t에 비하여 4월 말 재고는 8천8백t으로 증가하였지만 1~3월이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정도의 재고증가는 우려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5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은 7% 증가한데 비하여 판매는 약 4%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의 격차는 11%에 달함에 따라 '88년 말 분유재고 3천t이 '89년 말에는 1만5천t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평균 생산량은 8%가 증가한데 비하여 소비는 1%가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9%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90년도에 들어와서 비수기인 1~3월을 맞이하여 엄청난 재고의 증가를 가져와 3월말 분유재고는 2만t에 이르렀고 6월말재고는 15천톤으로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근본문제 해결 결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

■ 원인

이러한 수급불균형에 대한 원인은 이미 지상을 통하여 발표된 바와 같이 첫째 '89년 1~2월중 이상구씨의

채식위주의 건강이론과 우유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망언이 TV를 통하여 전국에 방영된 것과 둘째는 4월 1일부터 원유값을 13% 인상함에 따라 제품가격이 시유의 경우 11%인상(기타제품은 5~9% 인상)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배달원들도 생계비 보장을 주장하며 배달 마진을 늘리므로써 소비자가격은 25~35% 인상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셋째로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원인인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유의 소비가 '89년도에 8%나 감소한 것과 특히 4월이후 10% 가까운 감소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감소는 인상률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적게는 1~2개월 길게는 3~4개월이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며 소위 이상구 신드롬도 89년 1~2월 이후에는 그의 이론이 허구적이라는 것이 많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졌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소비감소의 원인을 가격인상과 이상구 신드롬 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그 원인을 경기침체에 돌리기에는 논리의 무리가 따른다.

정부는 원유수매자금으로 200억 원 융자, 불법유통되고 있는 유제품의 지속적인 단속, 대용유업계에 정부보조에 의한 분유 2천t 공급, 학교급식 26억원 보조외에 낙농진흥법을 개정할 것과 정부가 분유 5천t을 시중유통 가격으로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위의 대책은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효과를 당장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하더라도 다소 재고가 감소한다든지 재고감소의 전망이 보여야 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3월 말 현재로도 호전의 기미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4의 원인은 자사제품만이 좋은 것이고 타사제품은 나쁜 것이라는 파스타르유업의 과대선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식품에 대하

여 불신감정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진짜 가짜논쟁은 우유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지속적인 소비감소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타개책

이러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정부 및 낙농 유업계에 대응책은 이미 '89년 11월과 '90년 2월 및 5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우유수급종합대책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낙농가들은 저능력우를 도태하는 일이고, 유업계는 공동홍보의 실시, 학교급식의 확대, 낙농가에게 송아지용으로 분유를 염가공급(kg당 2500원), 유사유제품 수입규제를 위한 산업피해 구제 신청 등이었다.

정부는 원유수매자금으로 200억 원 융자, 불법유통되고 있는 유제품의 지속적인 단속, 대용유업계에 정부보조에 의한 분유 2천t 공급, 학교급식 26억원 보조외에 낙농진흥법을 개정할 것과 정부가 분유 5천t을 kg당 3,000원에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종합대책의 수립결과 생산은 30% 증가에 그치고 소비는 12% 증가 한다해도 90년 연말재고는 1만3천톤을 전망하고 있고 정부에서 5천톤을 구매할 경우 91년 3월말 재고는 1만5천톤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이러한 종합 대책의 결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제시해 보고저 한다.

1) 학교급식 보조금 증액 및 행정지도

90년도 정부의 학교급식계획은 보조금 26억원에 하루 600만 명 급식을 목표로 잡고 있으나 5월중 급식 실적을 보면 500만명에 미달하고 있으며 2월부터의 누계실적을 보면 455만명 선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지급 제도를 현재의 극빈아 전액 보조제에서 전체급식 아동에게 일부금액을 보조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일인당 5원보조시 연간 100억 원 소요)

둘째로는 학교급식이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체위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급식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문교부의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자조금제도에 의한 공동홍보 확대

그동안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84년 이후 3~10억원의 금액을 매년 유업체로부터 거출하여 우유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규모가 너무나 적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TV,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을 통한 종합적인 공동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낙농가들도 소비확대운동에 참여하는 소위 자조금제도의 도입이 있어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 낙농가들이 연간 자조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2억불(한화 약 1400억 원)이나 되며 일본의 경우는 정부와 유업체, 낙농가들이 공동으로 60억

엔(한화 약 300억 원)을 거출하여 공동홍보를 실시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낙농가들이 원유 1kg당 1원씩만 공동홍보를 위한 자조금으로 지불할 경우 연간 1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공동홍보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유통구조개선

이미 '89년도의 원유가 인상에 따른 제품가 인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앞으로는 판매원 또는 배달원의 충분한 생활보장이 되지 않으면 판매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생활보장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유통마진이 엄청나게 불어나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유통구조의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지 이러한 유통구조의 개선은 유통업계의 근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유통조직

의 반발을 감수해 나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유의 공급불균형은 누구에게 책임을 떠맡긴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못되므로 다같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낙농업계와 유업계와 정부가 공동운명체임을 깨달아 허심탄회하게 흥금을 털어 놓고 대화를 통해 상호양보와 협력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4) 낙농진흥 사업회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낙농진흥법을 개정하여 우유의 공급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낙농진흥사업회 설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낙농 유가공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며 이 낙농진흥사업회는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수출입창구의 일원화, 수매, 비축, 방출업무 등의 우유수급업무 뿐만 아니라 원유질에 의한 유가제도 즉 현재의 유지방에 의한 유가등급제도를 유단백, 세균수, 체세포수에 의한 등급제로 바꾸어 하루속히 유질을 개선하는 것이 신제품개발과 품질향상을 기할수 있는 길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우유소비 확대에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라 하겠다.

5) 유제품수출

낙농진흥사업회가 설립되면 동위원회에서 우유수급업무를 전담하게 되므로 당연히 유제품의 수출업 업무는 낙농진흥사업회가 전담하여야 하나 현재와 같이 수급전담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분유재고가 2만t이 넘고 버터재고도 3천t이 넘게 되자 제품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보관비용이 점증함에 따라 유업체에서는 투매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나 수요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격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제품 수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지 유제품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의 1/3~1/

4에 불과하여 수출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므로 수출 후 우유수급이 호전될 때(2~3년이내)에 동일물량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고 수출입에 따른 결손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공동운명체 인식제고

한국의 낙농 유가공업은 정부주도하에 발전하여 왔고 낙농과 유가공업은 공존공영의 상호불가분의 공동운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공급불균형에 따른 각종좌담회 내용을 보면 상호불신과 대립의 관계가 심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낙농가는 분유 체화의 원인을 유업체에 책임을 떠맡기고, 유업체는 미온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정부에 떠맡기고, 정부는 유업계의 지구노력 부족과 낙농가의 미온적인 저능력우 도태에 책임을 떠맡기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누구에게 책임을 떠맡긴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못되므로 다같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낙농업계와 유업계와 정부가 공동운명체임을 깨달아 허심탄회하게 흥금을 털어 놓고 대화를 통해 상호양보와 협력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